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78 회

제 3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가. 조신형 의원
 - 나. 김인식 의원
 - 다. 권형례 의원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지원 결의안
4.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가. 조신형 의원(일괄질문)..... 2면
 - 나.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9면
 - 다.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14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부교육감)..... 21면
 - 보충질문(조신형 의원, 권형례 의원) 및 답변..... 36면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53면
3.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박희진 의원 외 7인 발의)..... 54면
4.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면
5.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면
6.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57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61면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3분)

○議長 金南勛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을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관계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이원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신형 의원(일괄질문)

(10시 05분)

○議長 金南勛 그러면 먼저 조신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한나라당 서구 출신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화두가 된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구온난화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녹색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 가야 할 생존전략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대전의 환경정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도시 ‘그린시티 대전’ 이미지 구축에 한층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유기성물질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변동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또 경제활력감소로 상당히 국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풍력, 태양광, 수소전지 또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자원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또 관련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여건의 변화입니다.

CDM 사업이라고 해서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무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는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상당

부분을 감축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차 의무국가,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2차 의무국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라든지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CERs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처리공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우선 하수슬러지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또 가축분뇨 이러한 폐기물을 현재까지는 매립이라든지 또 해양투기, 사료화 또 호기성 퇴비화,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과다소비형의 정책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문제는 해양투기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사료화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환경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라든지 화석연료사용 억제 또 신재생연료개발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바로 혐기성 처리 공정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포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녹색기술의 핵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입니다.

폐기물에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은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 이러한 것을 RDF 전용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화력발전소 원료공급을 해서 전기라든지 온수, 폐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유기성 폐기물인 축산분뇨나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또 MBT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기나 CNG 등 이러한 것의 자원을 순환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폐기물 분야의 녹색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자급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 창출로 고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 추진 방향을 보면 대전시 그린시티 조성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위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스템 시설을 도

입할 예정이며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고 또 매립가스발전소 사업을 시설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해야 됩니다.

대전을 녹색성장의 전략적 모델 구축으로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목표를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 조성으로 ‘에코시티 대전’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폐기물의 자원화로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폐기물 관리의 ‘Zero Waste’ 목표를 조기실현을 해야 됩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폐기물의 발전이라든지 또 연료화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다든지 또 태양광발전 또 생태공원 등을 통해서 CDM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전시의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향후 처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발생물질은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도시고형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톤 정도 발생을 해서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슬러지를 고형연료화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도 440톤 정도 나오는 것을 퇴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금고동매립지에 시설할 예정이고 도시고형물 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MBT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전시의 계획이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에 분산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개별시설 설치 시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악취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또 연료가 상당한 양이 소비가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 부분 나가게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도 잔류물 처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의 과다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시고형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폐플라스틱 등 분리된 가연성 물질 처리가 어렵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 이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시스템을 하나하나 운영을 할 때와 또 통합공정으로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단위공정 운전할 때의 문제입니다.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하루에 300톤 나온다고 볼 때 천연

가스 소모량을 계산하면 연간 약 60억 원 정도의 천연가스 소모량이 들어가고 또 음폐수 처리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소모량을 생각하면 연간 약 6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시설이 아니라 통합공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에서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개념도에 대해서 한번 기본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는 가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 분리를 하고 가연성의 경우에는 RDF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불연성의 경우에는 일부 매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경우에도 연료화를 해서 일부는 발전시설로, 일부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일부는 매립장에 가지만 일부는 바이오가스 포집을 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LFG 발전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수슬러지라든지 또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또 음식물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이나 소각되는 양이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그 유희부지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또 태양광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단지 조감도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단지에 폐기물 처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선 폐기물이 들어오면 MBT시설을 통해서 선별분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서 RDF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온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가스를 통해서 소화가스발전 시설로 해서 전기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부지에도 환경교육장이라든지 생태공원조성까지 하면 전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생태환경을 관람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에너지 물질화를 하는 수지도입니다.

자원 소스 중에 방금 말씀드린 폐기물 부분 500톤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은 선별, 파쇄를 해서 연료화를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연료화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혐기성 소화를 통한 가스포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 생산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간 폐기물의 경우만 해도 약 7만 8,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약 1만 9,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합치면 상당 부분 하나의 단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공정 운영 시에 열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통한 RDF발전 시설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생산된 열량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500톤 정도 발생할 때 250톤의 RDF가 생산이 돼서 폐열 회수량도 약 240Gcal 정도, 하루에 발생을 하고 또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도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에너지화하면 하루에 300톤 정도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폐열회수량도 약 60Gcal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공정 운영에 따른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념도입니다.

하루에 폐기물이 500톤 정도 나올 때 MBT 시설을 해서 선별 파쇄 분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발전을 하면 그 폐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열병합발전과 연계한 지역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슬러지의 건조라든지 소화조,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단지 구축의 기본 방향입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단지 조성 및 CDM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처리시설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는 CDM 사업 인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한데 개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CDM 사업으로 인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상호교환이 없이 개별시설로 하면 운영비만 과다하게 소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원조달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경우 외자유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연계 이러한 외자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전시나 또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관리회사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운영의 효율화로 생산에너지 증가 시 운영비 절감 및 추가 탄소배출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구성 방안으로써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외자 및 민자유치를 다 할 수가 있겠고 해외투자자나 대전시, 국내 민간기업 등 공동재원조성이 가능한데 전체 총 사업비 중에 외자와 내자를 포함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는 국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단지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우선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시켜서 탄소배출권을 높이고 또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또 LFG발전, 태양광 또 매립 여유부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편익이 오고 또 사회적 측면으로도 연간 6만 6,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탄소배출권과 관계 있는 그런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약 60억 원 정도의 수입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 폐기물에 대한 개별시설보다는 하나의 단지를 통해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하고 제안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CDM 사업과 연계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지가 설치된다면 대전은 생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대전시의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분산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개별방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의 과다투입은 물론이고 개별시설은 CDM사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국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고 더불어 소각로나 슬러지 처리 시설의 도심지 내 설치로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이들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합처리를 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소각량이나 매립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서남부권 소각로는 인구증가의 둔화를 고려하여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의 경우에도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설치해야 합니다.

과학 에코도시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 조성,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 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별책

○議長 金南勛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10시 24분)

○金仁植 議員 민주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위기 극복은 물론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대전시의 현안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환경문제 및 대전교육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특구는 전국 최대의 연구 및 기술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집적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과학기술 분야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탈대덕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덕특구의 연구역량이 더욱 결집되고 강화되지는 못할망정 대덕특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대전시의 위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분원, 분소, 연구센터 형식으로 연구시설들을 타지역에 이전 또는 설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개소 등 연구기관마다 2개소 내지 3개소 이상씩 타지역에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탈대덕현상은 2004년부터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타지역에 더 많은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

립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의 핵연료 재활용 등을 위한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165만~198만㎡ 규모의 제2연구소 건립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슈퍼컴퓨터 제5, 6호기 도입에 따른 공간마련을 위해 슈퍼컴퓨터 전용건물을 타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이스트에서도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들과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화 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 송도 청라지구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최근 MOU를 체결했는가 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도 각각 분소나 연구협력센터를 타지역에 설립하거나 개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떠나가는 현상이 많아지는 이유로 첫째, 지난 30여 년간 연구기관들이 성장하면서 근무인원 증가 및 기자재 설치 등 연구용 부지 확장이 필요해졌지만 특구 내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둘째, 대전시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내면에 깔려 있고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셋째, 타지자체들이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매달리면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부지 무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별다른 대처방안 없이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부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탈대덕을 별 제동 없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다른 한 쪽에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 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에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식의 대덕특구를 폄하하는 시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탈대덕과 대덕특구 폄하 시도가 지속되어 대덕특구의 위상이 점점 추락될 경우에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와 산업육성 정책에 정말 큰 차질이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탈대덕을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 먹기 식과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공유로 보는 등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가 과학기술 전략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육성된 대덕특구의 위상과 앞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전국의 6개 연구단지 지정과 타지역 정치

권의 특구 확대 지정 법률안 제출 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타시·도의 대덕특구 흔들기를 막고 추락하는 대덕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기관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용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기관이 이전·확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연구용지 부족 문제로 인해 타지역에 분원, 분소 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연구 또는 산업용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덕특구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확대,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및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여 대덕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면 관리 및 처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마법의 광물, 돌에서 뽑아낸 실 그러나 침묵의 살인자, 끝나지 않은 고통, 석면의 공포를 알고 계십니까?

60~70년대 근대화시기에 석면은 건설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3,000여 가지 이상의 공산품에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석면이 우리 인체 내에서 1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사람 폐에 들어간 석면 분진은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불가능하여 한 번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300여 톤의 석면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석면이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 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건강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대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의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년 만에 1,410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2010년부터 목적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세가 사라지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서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교육세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부교육감께서는 최근 일고 있는 교육세 폐지 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시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가운데서 가장 자주 바뀐 정책은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의 불투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매우 낮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는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책임의 경영 역량이 미흡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지방에 알맞은 교육의 실천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대전시 교육 전반에 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들이 빠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사향을 면밀히 진단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여 대전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교육청 및 각 부서에서 수립한 발전방안과 관련된 21건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 수립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전교육발전계획 단 1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전시의 기획과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로 대전시교육청의 자체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발전방안 수립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각 부서별 발전방안 수립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도 역시 발전방안 수립이 전무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의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수립과 재정지원과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수립 계획만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발전방안 수립현황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전시 교육의 발전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발전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대전시 교육의 비전과 발전방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한두 사람에게 의하여 수립한 후에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과제의 실천 사항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방안과 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전국 최고의 교육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대전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 및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대전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반성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南勛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10시 48분)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기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발표로 인해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체의 경제공황 상태가 예상되는 등 21세기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대전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대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전시 대응방안입니다.

현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들어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로 기존의 지방 이전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3년 기업들의 해외투자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현지 시장개척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과다규제는 불과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규제만 풀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청권경제협의회 회의자료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일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되어 지방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2011년까지 비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24조 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와 8만 5,000명 이상의 종사자 감소가 예상되며, 우리 대전·충청권은 약 5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함께 3만 명의 종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충청권은 타시·도에 비해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징후로 이미 대덕특구 내 일부 벤처기업들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장 층이 두텁고 부동산 투자이익을 노릴 수 있는 수도권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

다는 의중을 언론기관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규제해제로 대전시 산업용지 조성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당초 계획은 대덕특구 1,2단계를 내년 초와 연말을 목표로 분양할 계획이지만, 만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의 이유로 1단계 분양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2단계 공급계획은 물론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에서 새로운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탄진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 산업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기에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대전·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지자체 간 공조가 부족하여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요구가 지리멸렬해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밖으로는 지방소비세 신설안 등 지방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안으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과 회유에 밀려 시·도지사들은 단체장으로서 정부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론에 따라 일단 정부의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상경집회에 불참하는 등 벌써부터 비수도권의 대응노력들이 용두사미격이 되고 마는 분위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원인이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지역역량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가 공조하여 대전·충청권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가 그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연대 등 각계각층에서는 연일 자치단체장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대응 동참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에서 평소 갖고 계신 정부대응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법 제정을 위한 목적규정 및 사업추진 취지에 부합된 장소에 입지해야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목적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을 선진의료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35년간 정부의 꾸준한 투자로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적자원 등 최적의 첨단의료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야말로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분야 입지의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 제정취지에 부합한 입지결정 논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락가락하는 정부입장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선도산업 발표에서 우리 충청권의 선도산업이 의약바이오산업으로 선정되고, 강원권 역시 의료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가 정부의 숨겨진 의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정부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타 경쟁도시들의 분산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얼마 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기공식에 참석하여 “대전과 대구, 광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를 만들어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시라는 점에서 대전시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과 관련된 정부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근거없는 언행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께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요건 외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는 입지결정의 핵심요건과 정부동향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 도시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아 왔던 만큼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다른 지역에 입지시켜야 한다는 대덕특구 견제논리를 펼치며 정치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예전과 같이 또 다시 대덕특구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만을 내세운 안일한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자기부상열차 및 로봇랜드 유치실패에서 경험한 것처럼 대덕특구가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가 지닌 훌륭한 연구 인프라 및 장점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대덕특구의 장점 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에 맞는 우수한 정주여건 등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치적 역량결집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마련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대덕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특성 및 장점은 무엇이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기초를 관광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의 중심도시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의 관광산업 현주소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한국관광공사의 2008년 상반기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수 관광목적으로 대전을 1회 이상 방문한 관광객 비율은 전국 13위로 나타났으며, 숙박관광객은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볼 경우 대전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일 관광객들의 여행동태를 통해 대전의 관광실태를 살펴보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은 평균 9시간을 머물면서 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숙박관광객은 평균 2~3일간 체류하면서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대전 관광산업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도시의 이미지는 관광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04년과 2007년에 보고한 대국민 관광이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가 미래 도시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창조도시와 연계된 관광실적이거나 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급자 중심형 이미지 관리, 추진역량 부족 등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현에도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과학도시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교통의 중심도시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의 목적지로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되시면 주로 어떤 계층이 무엇을 보고 싶어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이미지 관리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장 조사에 기초하여, 이를 선도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조도시 선언에 적합한 문화관광 컨버전스 전략추진과 관련된 관광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성장산업 중 하나로 문화관광산업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로 대전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조직과 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업무와 문화재관리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 기능 및 조직의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시책과 배치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문시됩니다.

한편,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극 홍보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들만의 보고 즐길거리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홍보기능은 그 어

능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과를 관광문화재과로 바꾸고 올해에는 관광업무 전담부서를 3담당에서 홍보기능을 없앤 2담당으로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남다른 견해 내지는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과 연계한 관련 인프라 구축 또 일본 자본의 호텔투자유치 및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선정 등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민선 4기에 들어 추진된 대부분의 관광활성화사업들이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상이 짙은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행정의 중심도시이자 창조도시 대전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 및 축제상품 개발·지원을 위해 ‘열기구축제 활성화’, ‘태권도 국제상품화’, ‘물축제와 견우직녀축제의 연계 활성화’, ‘회덕의 유교문화 자원 활용 및 확대’ 등의 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함과 동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우리 대전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南勛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부교육감)

○議長 金南勛 그러면 조신행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조신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환경과 관련된 소위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과 제안 또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과도 연결을 시킴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우리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그간의 환경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나무심기라든지 하천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아울러서 자전거 타는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R&D허브를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일에 저희가 관심을 써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질문 겸 방향 제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유가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도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계획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분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을 통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운영 중인 LFG발전소와 향후 건설될 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연계한 CDM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CDM사업으로 인한 수익창출 예상액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로 인해서는 연간 8억 3,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서는 연 20억 원,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로서는 연 8억 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처리공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화로 전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도 환경변화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화 단지를 조성해서 폐기물 시설 간의 에너지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도 폐기물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설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확보 노력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비를 위한 설계비 15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등을 요구해 놓고 관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 등 국제환경규범을 감안해서 볼 때 사업의 시기적인 시급성, 시 재정 부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 시설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집적화단지 단계별 조성 계획은 제2매립장의 경우는 1단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T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등을 고려하고 있고, 2단계로서는 14년 이후부터 LFG발전시설, RDF전용보일러,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시설 구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금지로 건설기간이 2년여밖에 없는 촉박한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법결정, 부산물 수요처 확보, 발주방법 심의를 완료하고 200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지만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를 위해 폐기물집적화 단지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입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소요기간과 매립장까지 이동에 따른 소요 비용,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민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CDM사업의 연계성 및 경제성을 사업초기부터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시설관리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향후 1, 2매립장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을 상호연계 집적화하여 중부권 최대의 친환경폐기물처리시설 단지로 조성을 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를 아우르는 공존사회를 위한 건강한 환경도시, 그린시티 대전비전을 천명한 바와 같이 깨끗한 환경모범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이 대전을 찾아와서 어떤 교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하기를 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환경시범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녹색성장포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제안과 교육을 위해서 오늘 포럼이 탄생을 합니다.

그 포럼의 책임자는 카이스트 부총장을 맡고 있는 양지원 교수입니다.

따라서 이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조신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달 안에는 그런 토론회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시정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주셨습니다.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문제와 석면관리 문제 또 대전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탈대덕 현상의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연구용지 부족 문제의 해결,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특구육성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 건의 등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세 폐지 시 대전시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단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최근에 연구단지가 타지역에 분원과 분소를 설치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보고,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확장성을 위해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과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을 노력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분소 설치를 유지하는 대목적적인 다양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돼서 기업들도 다소 이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타지역 분원 설치, 분소 설치 움직임은 정부출연연구원 본원의 탈대덕이 아니고, 대덕특구 성과의 확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민간연구소 및 기업들은 특구 내 상호기술교류 확대와 성과물 사업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기술연구소가 우리 대덕에 들어오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LIG넥스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연구소가 마찬가지로 대덕R&D특구에 입주할 것으로 MOU가 확정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덕특구 입주기관은 977개이면서 여기에 898개의 기업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이전검토 및 분원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대덕특구 내 개발중인 산업단지에서 연계사업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연구소 이전검토 사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슈퍼컴퓨터가 2~3년 뒤에는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카이스트 내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위치도 별도의 연구원을 확보하면서 아울러서 슈퍼컴퓨터의 신규 도입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상당한 면적을 요구했고, 거꾸로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분원적인 사무소도 대전으로 통합할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특구개발지구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변동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도 분원설치를 검토중인데 이 내용은 핵연료재활용 등을 위한 순환형원자력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량의 용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임해지역이 업무상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중에 연구용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연 등 연구소 건물 증축을 위한 가용지 확대를 위해서 이미 시조례를 개정해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용적률도 80%에서 15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3개 기관이 134만 2,000㎡의 추가개발 가용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연구소부지 및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도 특구 1, 2단계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내년 3월이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단계는 내년 12월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구지역에 입주기업들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해봤는데 저희가 먼저 수요자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면적의 약 4배가 됩니다.

산업용지조성 원가인하와 신속한 공급지원을 위해서 개발지역 내에 건축물 층고를 4층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건의했고, 정부에서 그

것을 승인하는 발표가 지난 11월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특구로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그린벨트 절차가 이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간과 번잡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구육성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상당한 공감을 이뤄서 입법과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중복이 되지만 국세·지방세 감면범위를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특히 그 중에 연구개발비 인정요건을 완화해서 첨단기술기업을 확대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도는 있으되 적용범위가 아주 적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그런 제도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유형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국비와 관련된 부분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범위에까지 똑같은 수준 이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특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재는 우선 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방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입주업종도 특구 내 가능한 업종은 13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분양 및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소위 자체 오염처리능력을 갖춘 업종에게도 입주를 허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덕특구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또한 대덕특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는 문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의 연구인프라와 연구인력, 그간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대덕특구에 그것이 적용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원자력 관련 연구인프라가 8개 기관이 우리 대덕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첨단의료분야 기술과 연계해서 세계적인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면서 원자력병원과 이미 MOU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가 정부에서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유치와 더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속적으로 카이스트와 관련 부분도 협력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 약간 부족한 연구중심 병원의 유치 문제도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하고 다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정되기 전부터 입장하고 상관 없이도 개별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대덕특구에 유치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는 이미 뇌과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는 영장류센터가 있고, 에트리에는 MRI와 PET의 성능개선 등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융합연구를 위한 시설, 인력들을 활용해서 뇌연구원 유치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R&D 성과의 생산비즈니스화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 임대산업단지의 지정육성도 건의한 바가 있고, 긍정적인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공단의 논의가 경기도와 일부 전라도에 배치돼 있는 모습을 보고, 특히 임대공단은 토지의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대덕연구단지와 같이 각종 연구인프라는 마련되어 있지만 산업화하는 부분이 미약한 그런 지역에 임대공단을 만드는 것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임대공단 지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하게 강조를 했고, 그 점이 임태희 정책의장에게 전달이 돼서 노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덕특구투자펀드가 지금 8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해서 장기로 기술금융을 강화해 가는 노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대전~행복도시~오성의 신교통수단을 조기에 건설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으면서 국가재원으로 국가산업단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와 연계되는 1단계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4개소와 입체교차로 1개 등을 포함하면 총 5개소에 1,6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당초에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덕특구에 6,612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515억 원 23%만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약속대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선도산업육성을 통해서 스타기업 첨단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60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소나 대학과 연관된 연구성과를 사업화시키는데 노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단지와 기관장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정보교류나 의견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집행기관 간부들을 비롯해서 연구단지를 개별 방문해 가면서 협력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기회가 닿고 시간이 마련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연구단지를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연구단지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이고, 또 의원님들도 연구단지를 새롭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의원님들이 대덕특구에 있는 주요 연구소를 방문하는 스케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석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석면을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를 해서 취급금지 및 제한조치를 지난해 10월에 이미 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고용 상태에 석면폐기물을 추가한다고 금년 7월에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내년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폐석면 발생 내역은 282톤으로 전량 처리되었는데 우리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처리를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데파트 철거 시 발생 석면은 지난 11월 10일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서남부권 불법매립 석면 2,300톤에 대해서 전문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5,400톤 반출처리를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석면은 2,300톤인데 반출처리는 5,400톤을 한 것은 하부 오염된 토사까지 처리함으로써 처리량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석면함유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허가된 전문처리업체에 적정하게 위탁처리되도록 관리하면서 석면함유폐기물 배출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 석면제품 및 신고절차 안내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용역이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중입니다.

내년 1월이면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 대한 대상은 다중이

용시설 7개소가 샘플로 조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상 321개소 중에서 64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 현재도 오염도 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중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노동청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세제 개편에 맞춰서 현행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여러 세원에 복합적으로 나뉘어서 부과·징수·교부되고 있는 교육세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심의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교육세가 본세에 포함되면서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과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예정이 됩니다.

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 전용 등을 통해서 보전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 소요의 재원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시점에서 교육세 폐지 논란보다는 교육세 폐지 전후의 교육재정 규모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행정안전부의 시·도 법정전출금 규모와 교부율 조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교육세 폐지 후에 현행보다 법정전출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는 비법정전출금을 확대하는 등 해서 지원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 돼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지방자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과 달리 경찰과 교육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써는 교육도 일반자치 속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별도의 독립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전체를 하면서 일반자치에 포함될 경우에 오히려 교육환경들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참고로 그간 교육지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은 법정전출금이 금년도는 1,874억 원이고, 지난 3년간

5,67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금년도에 160억 원이고, 지난 3년간 합하면 36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 규모가 민선 3기와 대비해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16%가 증가하였고, 비법정전출금은 민선 4기에 36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252%를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2010년까지는 634억 원을 지원할 경우 500%가 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간에 지원한 사업은 학교시설 지역사회중심센터 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안전한 통합환경조성사업, 평생학습도시구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5개 분야 27개 사업에 시비 3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대전관광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논의되자마자 저도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인지 수도권국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한 집안의 장남만 키운다고 해서 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장남만 비대해졌을 때 집안은 갈등으로 풍비박산 난다” 하는 논리로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고 수도권의 밀집도를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몇 개를 더 유치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수도권은 권력과 사람과 돈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언론, 금융 많은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도 수도권이 경쟁력을 못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덜기 위해서 기업을 몇 개 더 넣는 것이 수도권 경쟁력을 보강한다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민단체들도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지도자들께서 먼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시고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계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왜 시·도지사가 한꺼번에 나와서 거리투쟁이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채널과 관련된 기구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물려서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가 있고, 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들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광역시 행정과 도의 행정은 상당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미 각 광역시장과는 합의를 이뤄내서 별도의 광역시장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날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는 것처럼 광역시는 토지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린벨트완화 문제라든지 광역시 내에 있는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소방도로개설 문제 등이라든지 몇 가지 광역시가 특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광역시가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권한을 이양받는 이런 공통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소 중복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다소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와중에 상당히 전국에 모든 도시가 이제 미래를 위한 먹거리창출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기초임상연구시설 등을 갖춘 기존 단지에 가장 취약한 응용개발분야에 R&D 역량을 보강하여 최소비용으로 단지R&D 역량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적의 연구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지, 최단기간 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부지확보도 용이한 우리 대덕R&D 특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획위원, 추진위원 이런 각종 위원회를 맡아가면서 이 업무를 해오고, 시에서도 전문가를 통한 한두 차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에 따라서 다소 용역을 수정하고 재용역을 추진하는 이런 상태

에 있습니다.

그간에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1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했고, 청와대, 중앙정부 및 국회를 방문, 건의하기를 50여 회 이상을 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선도사업을 의약바이오산업의 선정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 또 대전시와 원자력의학원연구병원 설립 MOU 체결, 해외 산업의료도시인 하이텔베르크와 읍살라와도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국내외 대형병원 유치라든지 바이오메디컬센터 구축을 위한 월드컴경기장 주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또한 국제바이오메디컬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 입지결정의 핵심요건으로는 관계 인력시설 정주요건, 부지확보 용이성 등 특별법 상 요건 이외에 기초 연구성과를 전 임상연구로 연계시키기 위한 중개연구기능의 활성화, 첨단연구중심 임상병원의 유치, IT·N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의료융복합연구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동향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의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과정에 있으며 정부는 입지선택 세부평가 기준용역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입지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대덕특구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예산 절감을 통한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함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지 구입비, 장비비 등 초기투자 금액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8,600억원에서 5,000억원이 절감되는 3,600억원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타지역과 비교해서 성과 창출 기간이 약 10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최첨단연구병원 유치, 충남대 BMC협력사업 등 첨단의료융복합선도 프로젝트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전은 연구단지라는 인프라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개 첨단의료산업은 인구를 150만 정도 규모를 가진 도시를 주변으로 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정주여건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주와 오성 등도 유관 클러스터의 연계를 해서 대덕이 그 중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송도, 수원 광고, 충북 오송, 대구 등에서도 집요하게 이런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인프라나 능력보다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동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 언론, 출향인사, 관계 전문가, 연구단지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서 대덕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역량능력을 지나치게 폄하시킴으로써 자가지역에 유리한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덕이 가지고 있는 각종 주요 인프라와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특구지원본부와 우리 시가 협력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절하고 아주 잘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좋은 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많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여행 방문비율을 보니까 2004년에는 2.2%고 2008년에는 2.5%로 증가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국내외 컨벤션 참가자나 학생, 청소년들의 과학체험교육 목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인근지역의 관광을 위한 거점으로써 활용되는 점도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의 대전관광 임의조사에 따르면 대전은 엑스포공원, 유성온천, 대덕특구를 주로 하는 첨단과학도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대덕특구탐방, 과학체험관광, 뿌리공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맞춤형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여름에는 H2O페스티벌, 가을에는 열기구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등의 계절적 맞춤형 축제를 더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대전시가 전국체전을 열게 됩니다, 또 60회 IAC 총회를 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다양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종 손님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여관, 택시, 각종 안내기능을 하는 부분 또 상점가 이런 데를 협력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아울러서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초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로는.

그러면서 유성에 있는 숙박업소의 숙박객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월 간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숙박객이 6개월 동안 예년에는 12만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57%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컨벤션을 중심으로 한 회의산업을 많이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일,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각종 행사와 홍보성 이벤트들을 처리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아울러 갑천을 주변으로 한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명품으로 가꾸어놓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사람을 유입시키는 노력들을 더 추가해서 가미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우주 IAC총회와 더불어서 우리 중앙과학관과 협력을 해서 우주와 관련된 각종 교육교재나 체험기구들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이나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집중화시킴으로써 최소한 2, 3개월 동안 대전이 우주라는 개념의 컨셉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다녀가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성립이 되면 코레일과도 협력을 해서 주말에 소위 우주 열차라는 것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주말학습을 통해 대전을 방문해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협력시스템도 같이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내년 10월에 체전과 IAC총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백제문화제도 시기적 연계성을 같이 맞추어서 전국에 관광객 내지 외국인들이 결국은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관광과에서 관광문화재과로 바꾸고 담당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셨는데 관광과 관광문화재는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지 않은 실정인데 우암사적공원이라든지 동춘당도 45억원을 투자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문화재로 관광과 연계된 기능이 있다고 보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관광문화재과라고 했지만 이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 이런 것들과 연계된 것도 다른 과에서 문화산업 이런 쪽으로 연계성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능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더 확대되었습니다.

단지 관광문화재과라고 하는 조직, 그 조직의 이름과 거기에 있는 홍보기능들이 인근 문화체육국에 분산 배치되는 것이지 업무를 줄이거나 기능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치중이 많았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또 하드웨어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세울 자연관광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일환이 유성시민의 숲이라든지 그 옆에 하천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연계한다든지 갑천의 러버댐을 800m 내림으로써 거기에 카누 등 물놀이 수변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엑스포 남문광장을 개선함으로써 사계절이 전천후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공간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유지해 감으로써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다소 예산과 하드웨어적 성격의 자원들이 확충된다는 점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종 이벤트나 축제들을 특성에 맞게 복합화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들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충청권 방문의 해는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2010년은 한 도 한 시가 아닌 충청권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아마 시·도별로 20억 원씩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의 독특한 아이템을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견우직녀 페스티벌이라든지 유교문화지원이라든지 열기구축제라든지 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지역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기적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한 행사들도 장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붙일 것은 붙이고 뗄 것은 떼고 복합할 것은 복합하고 보탬 것은 보태는 식으로 해서 내년 행사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진정으로 우리 시의 특색에 맞고 또 오시는 분들의 소위 구미에 맞는 매력 있는 축제나 행사가 어떤 것인지가 정리될 것이고 그런 것이 파악되면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 것은 더 보강을 하고 별로 매력 없는 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勛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대전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서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합심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교육재정과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세 폐지 법률안과 지방교육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세목을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행 내국세 교부율의 인상과 지방세의 전입비율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계 모두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향후 대규모 교육수요 발생 시 교육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 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하에 현행 수준에 맞춰져 있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안, 즉 20%에서 20.39% 이상의 교부율 인상과 법정전입금 전입비율 인상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여 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전시 교육전반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종합발전방안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세부과제에 대한 액션플랜 수립, 집행결과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중장기발전방안이 없으면 조직의 목표나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경우 중장기적인 비전과 방향,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인식하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그동안 대전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215쪽 분량의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비전 21”이라는 제목하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대전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동 계획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의 대전 교육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대전시 교육청의 각 부서별 정책담당자인 장학관, 장학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하에 분야별로 중단기 종합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매년 성과 평가 등을 거쳐서 충실한 피드백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각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 학교 보건실 현대화 5개년 계획, 유아교육 중장기계획, 대전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IT 대전교육 중장기 추진계획, 대전과학교육 내실화 5개년 계획 등이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은 교육의 미래상을 담은 것으로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제 다시 5년 후를 전망하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내년 중에 대전교육비전 2010~2015년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전교육발전 비전이 타당성을 갖추려면 먼저 대전시 교육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현황과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전의 교육가족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광범위한 교육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교육정책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성과 검증을 위하여 피드백방안과 평가시스템의 상시 운영계획도 적극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대전교육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인식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국 최고의 교육브랜드 창출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민의의 전당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勛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조신형 의원, 권형례 의원) 및 답변

(14시 55분)

○議長 金南勛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까.

먼저 조신형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

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한나라당 서구출신 조신형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는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 또 강조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의 내용 중에 에너지화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폐기물도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MBT나 음폐수시설을 하겠다는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2매립장이나 1매립장이나 하는 부분에서 2매립장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기관이나 비용, 민원 등을 검토해서 협의를 더 하신다는 답변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CDM사업과 연계 또 에코사업단지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또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議員 국장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순환단지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공약사항인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은 우선은 어느 곳에 입지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매립장 또는 2매립장 중에 어느 곳에 입지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된 국제환경규범도 감안하고 또 사업의 시급성 또 시 재정 부담의 최소화 또 청정연료 고시지역 철회방침 등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를 한 후에 단계별로 도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지금 입지적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1매립장이든 2매립장이든 선택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체하고 자원순환단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통합자원순환시스템으로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하기 위해 한 단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議員 현재 대전시에서는 도심지 여기저기에 예를 들면 서남부권의 소각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슬러지 처리시설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원순환단지의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전도시 여기저기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모든 폐기물단지를 일시에 집적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남부 소각장을 말씀하셨는데 서남부 소각장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넘비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비용을 징수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서남부택지를 계획하고 할 때부터 이미 택지계획 단계에서 소각장 건설을 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였고 또 그 소각장과 관련해서 자원화단지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를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 자동집하장치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시설 중에 이미 열병합발전소가 업체선정이 끝나서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고 또 자동집하시설도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소각장을 타지역에 건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문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집적화시키는 것이 옳으나 하는 것은 우선 운송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그 부분 잠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議員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 “자원순환단지를 일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순환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을 했듯이 어느 한 단지에 집적화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못 하니까 못 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발생지 처리원칙, 어제 박희진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죠, 법적으로 꼭 시설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비용부담금을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대전시에서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아시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 부분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관련시설이 지금 공사 착공중에 있고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議員 그렇습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 일부 시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소각로가 없으면 열병합발전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도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면 더 투자가 안 될 수 있지요.

중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엑스포다리와 한밭수목원 사이의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일부 민자 고속도로를 넘을 수 있는 육교, 지하가 아닌 육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민 합의를 통해서 또 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거기는 육교보다는 지하차도가 맞다 해서 일부는 이미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지하차도로 바꾼 사례도 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남부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남부 1단지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모든 주민들에게 ‘여기는 소각로가 설치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 알렸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택지조성계획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분양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각로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택지조성계획에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위치가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택지의 분양계획은 있지만 아파트 분양 받는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양 안내서에 여기는 소각로가 있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유럽 같은 데서 소각로를 도심지에 놓으면 상당한 상징성도 있었고, 그 당시 예를 들면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심지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서 시민들도 이것은 참 공해가 없는 시설이구나 하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변하면서 소각로의 부분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도 배출이 되고 또 공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지가 아닌 곳에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 CDM사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에너지화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남부 1단지에 있는, 어제 박희진 의원께서 일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대전시에.

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는 1매립장, 2매립장 또 1, 2기 소각로가 있고 또 MBT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의 부분은 이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열병합발전소 일부 투자가 되었겠지만 빨리 이것을 협의를 해서 중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재검토 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議員 CDM 사업과 연계해 볼 때 여기저기 설치를 해서 전 지구적이고 또 세계적인 그런 조류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연 과학도시에 맞느냐, 또 CDM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런 사항을 뻔히 알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결국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CDM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과학도시 또 에코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CDM 사업은 이제 그 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반경 1km 이내에 분산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1km 이내에 동일한 시설을 갖다가 분산시켜 놓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 사업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

고, 다만 CDM 사업은 수가입증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총 이것을 계획할 단계부터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다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그 CDM으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km 이내에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획할 당시에서부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한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입안하고 할 때 다 CDM을 고려한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문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입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월달이면 이미 하수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 부분은 별도로 CDM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매립장하고 거기까지는 7.7km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서류를 저탄소 방향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그 CDM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면 됩니다.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CDM 사업도 연계를 해야 되지만 오전 시간에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낸 것처럼 집적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통합처리단지에서 시설할 경우에는 운반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제 이것이 옮겨간다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떠한 저희들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매립장에 있는 건축 연면적이 1만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1,000㎡의 10% 이내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10%를 상회하게 되면 당연히 개발제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슬러지 연료화 시설 자체가 3,2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허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소요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현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만약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면 하수슬러지의 처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냥 매립장에 매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저감을 하고 그것을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연간 119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趙信衡 議員 그러니까 그것은 그린벨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1매립장에 할 경우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1매립장에 건설폐기물 관련부지가 조금 있지요, 약 1만 9,000평 정도.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시간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모든 것을 1년 반 뒤에 있다고 해서 1년 반 뒤로 다 미뤄놓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지요, 그동안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업체 선정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 2년 늦어져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면 1, 2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용과 우리한테 득이 되는 곳 또는 손해가 되는 곳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議員 예,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 중에 소각로 부분을 추가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인가요, 여기에서 도심지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이미 했는데 이런 정도로 지금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운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폐기물처리를 충분히 1매립장이나 2매립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다시 하나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만 하겠습니까?

아마도 본 의원 생각에는 입주 당시부터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청에 와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론 민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자체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도심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스러운 그런 시설이 있고 또 MBT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나올 미래의 기술들을 생각한다면 소각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MBT를 설치할 해도 그것을 RDF라고 하는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BT를 만들면, MBT 시설에 들어가면 소각을 안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지금 MBT 시설로 가도 반드시 소각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연소가 가능한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 추출해 낸다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런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문제 때문에 대도시권에 대해서 그 청정연료 사용지역 고시한 것을 철회를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런 폐기물 분야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 일반 산업단지에서 하는 모든 소각로에 대해서도 같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에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초래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권역별로 지금 전국을 4 내지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광역 RDF 발전소 건설을 역시 병행해서 검토중에 있

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한 정부의 계획과 연관해서 저희들도 이런 모든 폐기물 종합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趙信衡 議員 지금 답변 중에 국장께서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MBT를 해도 RDF 나온 부분을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소각장에서 합니까?

오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열 효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RDF를 통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거지요.

그 발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발전소에서 소각을…….

○趙信衡 議員 그러면 그것은 소각로가 아니지요, 그것은.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인 거지요.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법 말씀하시는데 법은 개정하려고 환경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을 통해서 RDF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일반 산업단지에서 다 그러면 소각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뭘 염려를 하십니까?

시에서 그런 정도 규제도 못 합니까?

지금 대형유통매장, 법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줍니까?

시의 방침이지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창조인력과 창조산업을 유치시켜 창조도시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의 성공 관건은 어제 답변하셨듯이 도시의 환경이나 문화·예술 등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시장님의 나무심기나 자건거타기운동 등 친환경도시 조성 운동은 전임시장들의 일부 혹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꺼졌어요? 조금 남았으니까 좀 켜주세요.

(마이크 켜짐)

전임 시장들에 비하면, 전임 시장들이 환경을 파괴했다면 박성호 시장께서는

대전을 인간중심의 환경 생산적인 노력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 가치를 인식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를 한 번 설치하면 그 비용이 막대하여 잘못 설치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이 재시설이 용이하지 않고 민원과 예산낭비 등 시민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며 도심지의 이곳저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창조도시답게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에코도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약속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과학도시·창조도시로서의 면모에 맞도록 신재생에너지 허브타운조성으로 세계적인 에코도시를 지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노래는 11월의 화룻가에서 만들어진다는 하이네의 시귀처럼 우리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勛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한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서면질문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먼저 시장님께 많은 질문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촛음의 시간까지 동분서주하시며 대전발전에 고생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달 안에 결정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발표 등이 대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또는 경제적 큰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정책발표를 앞두고 재확인차 촛음의 시간까지도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뜻에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자랑이라는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와 대덕특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전의 최대의 강점이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의 국책사업들을 농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긴장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120만 명이 벌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떤 좋은 움직임, 다시 말하자면 우리 대전이 이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뚝뚝 뭉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도 좋고 또 자전거타기운동도 좋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자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위해 우리 전 공무원들은 푸른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친 너무나 큰 현안을 위해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푸른 제복을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유치경쟁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충북 오송지역과 공조를 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충북이 이런 공조를 거부하고 단독 유치를 취한다면 우리 시장님께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대안도 부탁드립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의 큰 경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덕특구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일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사단법인 대덕클럽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대덕이노폴리스 포럼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초청장에는 11월 14일까지 참석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는 16일까지도 아무런, 우리 국장급 이상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의 갖가지 행사 포럼들을 개최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본 의원도 서울에 올라가 포럼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특구 출연연대가 마련한 이 중요한 포럼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시점에 이 행사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여러 출연연들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협조문이겠지요.

대덕특구 내에 계신 여러 연구원들이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또한 이런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분분하는 와중에 어떻게 이 국책사업을 따올 수가 있을까라는 큰 염려가 있어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명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요건을 보면 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건 중에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 간 지역문화상품개발에 혈안이 되어 동네 잔치하듯 우후죽순 범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한 지자체들이 있어 무척 부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동양 최대의 불꽃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어떤 상품을 연구하고 있는지, 조금 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그 상품개발들이 우리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상품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면 도자기축제, 전라도 하면 소리와 음식축제, 대구의 섬유축제, 부산의 영화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 최근 다양한 축제들이 일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 그런 상품, 국제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에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태권도 상품을 국제 상품화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도라는 말을 본 의원이 한 종목을 지칭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중국 여행길에 중국의 소림사를 본 의원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바가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림사에 해외 국제적인 관광객이 공교롭게도 대전 인구에 준하는 150만 정도의 세계적인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태권도가 우리 전통무술을 좀더 상품화를 해서 국제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그 상품을 생각했던 본 의원의 생각은 무주의 태권도 공원이 2012년도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인근에 또 길목에 있는 우리 대전시가 그 상품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낸다면 그것 또한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상품은 물론이고 다각도로 연구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게 질문드린 이런 내용들에 깊게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南勛 권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회 후에 하시겠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시장석에서 - 그냥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겠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시장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권형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셔서 지금 적절한 답변이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제 “1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언제 전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모시기가 되면 같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제출할 때, 지금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명한 것을 잘 CD화한다든지, 어떻게 자료를 압축하도록 해서 그것을 공모 시에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120만명이 서명했다는 사실들은 미리 공표가 되고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의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지방선거 후 6월달 동안에 제가 우리 미술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 첨단의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인지를 했고 그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제기된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구심이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계획이 제가 기억으로는 5조가 넘는, 5조 6,000억원인가요?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할 것이 얼마, 지방정부가 3,000억원, 민간이 얼마 이런 개략적인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심스럽기에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소요가 되어 있어서 마련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와 이런 여건이 된 지역과 안된 지역은 구분이 되어서 그것이 설정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그것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전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해 오다가 선거라는 과정과 대선을 거치면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조차도 아직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그것을 계속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계속 우리 지역의 제안서 같은 것을 다듬었고, 전부 다 연구단지에 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등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현재로써는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공모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의 여건에도 맞고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외곽의 자문기구도 오래 전부터 만들어서 김시중 장관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2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의 움직임에서 연대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연대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세력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연대가 되면 정치적 파워가 굉장히 커집니다.

쉬운 말로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 여섯 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은 여당 국회의원의 수나 또 전체적인 수의 어떤 역할을 동원해서 연대함으로써 부족한 인프라나 그런 논리성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충북과는 다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부가 그것을 분산 배치할지 단독지역으로 지정할지 이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안의 구상은 가질 수 있으되 아직은 발표하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지금 시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나름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거기에는 거의 연구 관련 인프라와 인력, 경기 여건 이런 측면에서 매우 빈약한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공장용지의 확보성도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지장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통상 30만평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희같이 인프라가 다 있는 데는 그런 땅이 별도로 필요없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한 데는 그런 땅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이 다 기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소요되는 공간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커버해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리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적인 대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독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덕특구 행사와 관련해서는 글썄요, 아마 요즘 의회라든지 또 우리 집행기관에 감사원 감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예산 과정들이 지금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 간부들은 이 세 가지 업무를 한목에 지금 치르어야 되는 시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려워서 11월 18일 행사에 못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쳐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 있지요, 우리 시의회가 열려 있지요 또 예산을 투쟁하기 위한 국회가 열려있고, 중앙정부와 업무 로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안 맞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전혀 관심이나 이것이 없던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별법에서 입지여건 부족부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저희가 연구 인프라는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복합요소가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또 의약품개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원주는 그렇게 첨단의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기단지라는 게 기존에 있습니다 원주에,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첨단의료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첨복단지를 도전하고 있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배후에 많은 수요 인력을 가지고 있고, 배후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과 연결된 관문, 동남아라든가 관문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아주 좋은 입장이다 하는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료서비스의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보입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병원기능 중에서도 연구중심 병원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연구중심 병원을 만들어가는 일을 골똘하게 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어떻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는 방법이 없는가 연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적절하게 유리한 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만한 실익이 있다면 제공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전에 옥스퍼드 쪽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연구중심 병원을 방문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도 우리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연계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의 참여속에서 연구중심 병원의 건설이나 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지금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병원의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불꽃축제도 이미 서울서

했고, 부산은 해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대전에서 불꽃축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 자체가 어떤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든지 비용만 되면 그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불꽃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할 때는 연계성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태권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다 권형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북에서는 무술축제가 열립니다.

무주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해서 연계성을 가질 겁니다.

그런 차제에 중간인 우리가 태권도를 테마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태권도를 알리고 또 널리 홍보하고 하는 기능들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커다란 축제나 무슨 큰 규모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작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알리고 권장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그 협회와 더불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 가지고 있는 전국체전과 IAC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이 지역이 과학도시인 만큼 특히 개막식과 관련된 부분에 과학과 연계된 개막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과제입니다.

다른 도시와 다른 과학도시로서의 특성을 어떻게든지 부각을 해서 그것이 문화예술 쪽으로 접목된 그런 독특한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는 데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축제도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난해에 해봤는데, 물론 거기도 보완하고 고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숙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을 해가면서 계속 점검보완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가장 맞고 다른 지역보다 독특하거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를 키워나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들을 관찰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중에 적절하거나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독특한 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議長 金南勛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議長 金南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社會委員長代理 金仁植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4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원의 자연학습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학습의 능률 제고와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현저하게 제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습의 질이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확신하기에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에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계약직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시의 관계부서 결원 발생 시에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성 있는 공사·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

○議長 金南勛 김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박희진 의원 외 7인 발의)

(16시 04분)

○議長 金南勛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인재대국 건설이라는 큰 국정지표 아래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유치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워 금년 하반기까지 영재학교를 한 곳 내지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과학기술도시 대전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과학인재양성에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선진 한국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재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물적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영재교육이 가능함으로 국토의 균형적 배치 측면에서도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과학영재학교가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에 유치되어 교육과정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여건 개선 및 확충 원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勛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정부에서 체계적인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가 과학교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대전이 최적지임을 알리고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시 08분)

○議長 金南勛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梁承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

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059억 1,400만원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2009년도 문화예술공연달력 제작 등 9,3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699억 1,1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4,367억 3,100만 원으로써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勛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심의된 사안인 만큼 시민편의와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따른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박성호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조례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추가로 확보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을 가지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바우처 지급 등 복지 관련 경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배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을 위해서 20여 일이나 앞당겨 심의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제안과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勛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16시 15분)

○議長 金南勛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90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회개요로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입니다.

내년도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약 2만 5,000여 명으로 선수 2만 명, 임원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41개 종목과 체전사상 처음으로 항공스포츠를 전시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개최효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스포츠축제로 한민족 통합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을 빛낼 엘리트 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수준을 향상시켜서 체전 개최 이후에 생활체육과 레저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전국체전 특수를 통해 경제유발효과 3,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5,0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크게 4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시설 최대 활용등 효율적인 대회 운영으로 경제체전을 이끌고, 우주·과학·문화가 함께 하는 창조체전으로, 한민족화합체전으로 또 완벽한 체전준비를 통한 일등체전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이미 준비체제를 구축했고 지금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기획단을 출범했고,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대회집행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엠블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확정했고, 지난주에는 개·폐회식 연출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체전준비 예산은 1,032억 원으로 운영비가 약 20%, 시설비가 약 80% 투자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33억 원, 시비가 699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까지 58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4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물가변동으로 추가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국비확보에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부족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경기장은 65개로 관내에서 62개를 소화하고, 사격·조정·요트는 다른 시·도에서 경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설 경기장은 7개소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육상보조경기장과 정구장을 신설하고, 용운동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영장을 짓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인라인롤러장과 인공 암벽장 등 계획 공정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55개 중 37개를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수돼 있는 경기장도 있고, 대부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전의 꽃인 개·폐회식 및 성화 축하행사를 대전의 특성과 차별성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행사를 우주와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살리는 연출 기획을 담아서 대전의 역량을 대내외에 마케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 입·퇴장시간 단축 등 의식행사의 간소화와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을 살려서 관중과 선수가 함께 느끼고 즐기는 행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하는 공식 채화 외에 대전의 정체성을 살린 차별화된 성화 채화를 IAC 행사와 연계해서 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9m 상공에서 채화하는 여명채화와 또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3대 하천에서 채화하는 과학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화봉송도 열기구 봉송, 휠체어 봉송, 자전거 봉송 등 특색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경기환경 조성입니다.

신설 경기장과 보수 경기장을 조기에 완공해서 준공기념 동호인대회 등을 개최하고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도 공·승인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체전 개최 이후에도 국내외 주요대회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손색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확산, 도시미관 정비, 숙박·요식업 시설 환경개선, 교통대책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체전을 이끄는 자원봉사자도 조기 모집해서 소양교육 등 훈훈한 정감을 느끼는 일등체전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체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단계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4일 D-300일을 계기로 해서 대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정홍보물과 관내 유관기관 사보도 적극 활용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D-100일 이후에는 기획특집과 대담방송, 릴레이 기고, 차량 외부광고, 전광판, LED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체전분위기를 확산하고, 한달 전까지 아치, 홍보물 설치를 완료하고 IAC와 연계해서 배너기를 설치하는 등 체전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이벤트광장 등 시민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해외동포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체전소식을 제공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시에는 충청향우회와 교민체육회를 방문해서 대전체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IAC와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 해외동포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한민족 화합축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전국체전 의미를 담아서 특색있는 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체전사상 처음으로 항공스포츠를 도입해서 육상·수상·항공스포츠가 동시에 개최하는 체전으로 승화시키고, 체전기간 중에는 스포츠용품전, 체육진흥 학술대회, 스포츠스타 팬사인회 등 스포츠 마케팅도 적극 전개하고, 각 시·도 대표선수단, 해외동포 초청공연과 IAC 전시물을 연계한 전시활동 등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창조체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전 개최지 시민의 자긍심이 달린 종합순위 3위 달성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수영입시기를 맞아서 조기에 우수선수 영입을 마무리짓고 또 부진팀 개편, 부재팀 보강 또 기업 1선수 후원하기 등 경기력 향상에 노력을 해서 목표점수 5만 7,000점을 달성해서 개최도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의 반은 들어주는 것이고 사랑의 반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체전을 위해서 그 반의 지혜를 모아주시요.

감사합니다.

(참조)

·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勛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보다 알차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6시 44분)

○議長 金南勛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오영세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 사임 처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이 그동안 위원장 사임의 예에 따라 회기 중에 본회의의 동의로,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의사를 표명하신 네 분의 의원님의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오영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의 위원 사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병배 의원님, 광영교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네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6시 46분)

○議長 金南勛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어제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학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인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남옥	오영세	양승근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광영교
김학원	조신형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행정부시장	박찬우
정무부시장	김영관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
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녹지국장	이상용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박호선
공보관	윤태희
감사관	손성도
정책기획관	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국장	강진수
기획관리국장	박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 사임 위원 명단

오영세(한나라당)
오정섭(한나라당)
송재용(한나라당)
박희진(한나라당)

• 보임 위원 명단

전병배(한나라당)
곽영교(한나라당)
김학원(한나라당)
박수범(한나라당)